

전복양식 지원금은 눈먼 돈? ... 피해금 회수도 안돼

전복 양식을 이유로 수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쟁기 해남 어촌계 회원들이 사기 등 혐의로 법원 판결을 받은 지 1년이 돼 가도록 피해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남군은 전남도·해수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데 전남도는 뒤늦게 부랴부랴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혀 불통 논란도 일고 있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보조금관리법위반 및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등 8명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해남군 자율어촌계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과 2015년 전북 육성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꾸며 해양수산부의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국비 50%·군비 40%·자부담 10%)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내고 타인 명의 계좌로 수천만원 보조금을 수령해 채무 변제를 하는 등 개인적 목적으로 쓴 혐의(사기·업무상횡령)다. 어촌계원 및 자율공동체 회원이던 다른

피고인들 역시 A씨 범행에 가담해 전복 가두리 시설 등을 교부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를 받는다.

해남군은 해당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지난 2014년~2018년 전복 가두리 시설 설치나 관리선 기관 구입 등에 쓰일 비용으로 총 4억439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실제 가두리 양식장은 소수 인원만이 사용하는 등 '공동 작업을 통한 공동 수익 창출'이라는 애초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럼에도 해당 공동체는 공동체 모범 사례로 인정돼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 관리 감독을 맡은 지자체가 해마다 이상없다고 승인해 준 탓이다.

당시 해남군청 담당 공무원이던 B씨는 "한국수산회가 관리하는 자율관리공동체가 1200개인데 평가를 거쳐 우수 공동체를 선정 후 유형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해당 공동체는 그 기준에 부합할 만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던 것"이라며 "다만 사후관리, 즉 공동관리가 되지 못한 부분이 문제되는 건데, (당시 제가) 놓쳐서

해남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공동작업·수익창출 없이 운영
해남지원, 8명 사기 등 혐의 집유
1년 가까이 피해금 회수 미적지근
"해수부 늦게 통보"... 郡·道 '불통'



그렇게 된 점은 인정한다. 따로 제보 받지 않는 이상 공무원이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전남도 감사 때 사후관리 소홀 부분이 인정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같은 상황 속 공동체 관계자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두 차례 해외 관광을 다녀오거나 어촌계원 20명이 인당 500만원씩 총 1억원을 나눠갖기도 했다. 뒤늦게 법의 심판까지 받았지만 판결 선고 1년이 다 돼도록 이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반환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고의적인 부정수급자는 해당 보조금 5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받는다. 오는 9월부터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을 고의적으로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군청 고문변호사에게 부정수급액 환수 여부에 대해 자문했고 2015~2018년 보조사업 내용만 환수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

다. 지난해 8월 전남도에 제재부가금 500%(6억1573만5000원)와 보조금 1억 2969만4000원을 환수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당시 도는 '해수부로부터 공소제기 전에 반환명령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빠져있어 (환수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답했다. 하루빨리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싶는데 정부 차원의 뚜렷한 결정이 없으니 시간만 흐르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해수부답이 늦어져 최근에야 환수 결정이 났다며 법적 절차를 거쳐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친환경수산과 관계자는 "지난 1월초 해수부로부터 부정수급액을 회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환수 금액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듯 하다"며 "사전통지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군에서 환수 후 해수부 통보에 따라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된다. 군측에 (해수부 결정을) 전달했는데 아직 보고가 안된 듯 하다"고 답했다. **양기남 기자·해남·전원수 기자**



나주시가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영산강 국가정원 조감도'. 나주시 제공

'제2의 순천만' 나주 영산강 국가정원 윤곽

윤병태 나주시장 22일 현장공개 영산강르네상스시대 비전 발표

순천만 국가정원에 버금가는 '나주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 청사진이 곧 공개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출범 후 나주시가 환경부의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항구적인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둔 치수·이수 사업과 함께 저류지 공간에 친수사업으로 영산강 정원을 자체 조성하고 있다.

영산강 정원은 나주시가 최종 목표로 삼은 국가 정원 승격 지정을 위한 1단계 사업이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나주시장이 민선 8기 지역 발전 핵심 동력으로 내건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 비전'을 밝히는 언론 브리핑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영산강 저류지 국가정원 조성 현장에서 열린다.

이날 윤 시장은 '영산강 정원 조성사업 경과와 비전', '2024 나주 영산강축제 기본방향',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참석 언론인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나주시는 올해 통합축제 개최 시기에 맞춰 영산강 저류지 17만평(56만1983㎡)에 축제 광장, 테마정원, 주차장, 피크

닉장, 진입 교량, 제방도로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나주 대표 축제인 '2024 나주 영산강축제'는 영산강 정원 일원에서 10월 8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윤 시장은 영산강 정원을 상설 축제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진행 상황과 축제 일정, 주요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지난 8일 위촉한 박명성 총감독을 언론인들에게 소개한다.

이어 남도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기 위한 전남도 공약사업인 '남도의병 역사 박물관' 조성사업 배경과 사업 대상지 선정 등 그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힌다.

지난 16일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에서 확정해 시에 제출한 나주영산강테마파크내 '고구려궁 드라마세트장 철거' 권고안을 토대로 2단계 사업부지 활용 방안과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을 포함한 남도의병 역사공원 추진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은 2024 나주 영산강축제,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은 500만 관광객이 나주 실현을 위한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공감·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현장 설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순천시가 주민세 징수액을 마을 사업에 환원한다. 지난달 30일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진행한 서면 벚꽃축제 모습. 순천시 제공

순천시, 주민세 11억 전액 마을 맞춤형 사업에 쓴다

돌봄·환경·축제 등 비용

순천시가 주민세 징수액 전액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한 마을 사업으로 돌려주는 주민세 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세 환원사업은 주민에게 징수한 주민세를 해당 읍면동의 마을 자치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24

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과 함께 시작했다.

올해 사업규모는 주민세 전액 11억 5600만원에 달하며, 24개 읍면동 주민세 징수 비율에 따라 최소 2000만원부터 1억 9000만원까지 배분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마을 곳곳을 돌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쳐 주민총회에서 마을계획을 결정했다.

이제 올해에는 지난해 결정된 마을계획을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 주민이 직접 실행한다.

사업 내용은 돌봄, 환경, 축제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민 다수가 혜택을 받는 공공서비스 분야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전남도, RPC 벼 매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 건의

전남도는 2023년 RPC 벼 매입자금 융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6월에서 8월로 2개월간 연장에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의 ODA 식량원조국 추가매입에도 불구하고 산지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일부 RPC에서 벼 매입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대출 상환금 확보를 위해 시중

을 보유하고 있어 대출 상환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지쌀값은 지난해 수확기부터 하락하고 있으며 지난 5일 기준 수확기 대비 13.5% 하락해 19만1704원(80kg)에 거래되고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벼 매입 자금 상환기간이 연장되면 시장에서 쌀 거래가 적정가격에 이뤄질 것"이라며 "쌀값 안정을 위해 RPC재고 판매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적정가격 판매를 지도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근재 기자

가보다 낮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남도에 배정된 벼 매입자금은 6945억원(정부1719억·농협중앙회5226억)이며, 대출기간은 지난해10월부터 오는 6월까지 10개월이다.

전남도 내에는 농협RPC 21개소와 민간RPC 9개가 있으며, 3월 말 기준 전년 대비 53.6% 많은 303천톤의 쌀 재고물량